

여야, ‘비쟁점·민생법안 초당적 신속 처리’ 합의

국힘·민주, 정책위 의장 첫 회동

간호법 등 이견 없는 법안 위주
돌봄·인재육성·전기료 감면 등도
금투세 폐지·25만원 지원은 이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정책위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상훈 의장은 “양당 정책 담당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스크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회동하는 게 어떨까. 금투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진 의장이)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실무진간 협의를 거쳐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발의 법안 중에도 우리당과 합의처리 가능한 법안이 있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법률, 임대주택 공급 관련된 법안 등 여러 법안을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동을 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왼쪽) 국민의힘 간사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관련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의장은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위에 실무 검토를 먼저 하고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의장이 또 만나 합의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선에서 이견이 없는 거로 확인된 법안, 이견 있는 건 있는 대로 만나서 합의하고 국회 프로세스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진행하겠다”며 “간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또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진 의장은 “김 의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다”며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

는 입장”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며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당 대표 직무대행이 그간 영수 회담을 상대방 대통령에게 제안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톱(초대형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재 위기는 운정부 힘만으로 돌파하기 어렵다. 경제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DJ 사저 매각, 백지화하고 문화재 지정해야”

DJ재단 “분노… 민주 대응 개탄” 이병훈 “근현대문화유산법 활용”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고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정치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대통령의 동고동 사저를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민간인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김 전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가 37년 간 머물렀던 사저는 군사정권의 암살 위협과 사형선고를 견디며 끝내 지켜낸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산실이자 역사적 장소다”며 “사적으로 취할 공간이 아닌 만큼 매각을 백지화하고 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더불어민주당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김대중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참으로 개

탄스럽다”며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를 맞이하는 8월18일에 전당대회를 잡은 것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 동고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화동의 이승만 대통령 가옥, 신당동의 박정희 대통령 가옥, 서교동의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동고동 사저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SNS에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제가 발의해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며 “우선 국가 유산청이 사저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개발 행위를 유보하고,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재매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 “양곡관리법 조속 개정” 촉구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 ‘쌀값보장 농민대회’에 참석해 쌀값 대폭락 규탄 및 농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장흥군 농민 150여 명도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플래카



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쌀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박형대 의원은 “농촌지역 사회가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쌀수입을 중단하고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지현 기자

민주, ‘수사대상 추가’ 채상병 특검법 오늘 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韓, ‘제3자 추천’ 속도 조절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가 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고(故)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

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특검법에 한 대표가 주장하던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전당대회 당시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하반기 전공공의 모집 연장 진행”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이번주 중 하반기 전공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며 “정부는 전공공의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저조한 전공공의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



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공공의 분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분들의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하반기 모집에 응한 전공공의 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원하신 전공공의 분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7645명을 뽑는 하반기 전공공의 모집에 10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1.3%로 집계됐다.

한 총리는 “이번 달 말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